

# 사회구성체 논쟁

김동춘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 1. 논쟁의 개관

1980년대에 활발히 전개된 사회구성체 논쟁은, 우리 역사 속에서 그 맥락을 살펴보면 1960년대의 한국자본주의 논쟁, 중산층 논쟁, 민주주의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중반의 이러한 논쟁은 자본주의적 발전모델의 타당성 여부는 불문에 부치고, 넓게 보아 한국이 서구와 같은 근대화의 모델을 계속 추구하여 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족주의적 발전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이 주어져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10월유신이 일어나고 군부 파시즘이 강화되면서 약간의 사회과학방법론 논쟁, 민중론 논쟁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모든 사회과학적 논의가 금기시되었다.

80년대에 활발히 전개된 사회구성체 논쟁이 과거의 사회과학계나 사회운동진영에서의 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에 대한 논쟁과 질적으로 상이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과거의 논쟁이 사회과학의 반을 점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의 틀을 부정, 무시하거나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에 반해, 사회

구성체 논쟁은 마르크스주의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하고 그러한 인식 지평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2) 과거의 사회과학적 논의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토대, 정치체제, 사회운동세력의 성격 등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사회구성체 논쟁은 사회인식의 철학적 기반에서부터 변혁주체의 형성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갖춘 입장들간의 대립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진로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문체시되었다. 따라서 각 입장간에 뚜렷한 경계선이 그어져 논의의 구도가 비교적 선명했고 쟁점이 확실히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3) 과거의 논쟁도 상당한 부분 실천적 문제의식에 입각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회운동과 상대적 거리를 두고 있었던 지식인들의 고민의 산물이었음에 반해, 80년대의 사회구성체 논쟁은 우선 80년 광주에서의 패배라는 운동의 구체적 경험과 85년 총선에서의 참여문제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천지향성이 더욱 뚜렷하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사회구성체 논쟁은 크게 보아 한국사회의 제3세계적 성격, 사회발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입장과 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로서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여러 입장이 시론적으로 제기되던 제1단계와, 이러한 다양한 입장들이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구분되는 제2단계, 그리고 이 두 입장과 더불어 한국자본주의의 자생적 축적기반의 확립과 한국사회의 서구화, 사회운동의 개량화 가능성을 적극주장하는 중진자본주의론이 추가되는 제3단계로 크게 구분해볼 수 있다.

우선 제1단계의 논쟁은 크게 보아 1970년대까지의 지배적 논리였던 자본주의적 근대화, 중간층 유성에 의한 정치적 민주화의 모델을 부정했던 과거에서 한국사회의 제3세계적 성격을 주목하고 한국자본주의의 종속성을 강조하는 일각의 주장에서 논의가 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자본주의적 근대화와 민주화의 허구성, 불가능성을 지적한 점에서 커다란 인식상의 지평을 개척하였으나, 한국사회의 모순은 자본주의 발전의 지체, 왜곡, 기형화 등 주변부적인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실은 자본주의적 모순 그 자체에서 유래한다는 독점자본주의론에 점차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속이론을 비롯한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특수성, 기형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개화되기도 전에 보다 강한 이론적 완결성과 뚜렷한 실천지향성을 갖는 보편주의적 논리에 밀려났다.

2단계에 들어서 초기의 독점자본주의론, 노동계급 변혁주체론의 성격을 지녔던 정통적 정치경제학적 시각은 여러 차례의 논쟁과 실천적 경험을 거치면서 점차 한국이 국가독점자본주의로서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나 신식민지적 규정을 받고 있는 사회라고 보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자본주의적 발전과 정치적 억압이 공존했던 러시아혁명의 경험을 한국사회에 대입하여 한국 변혁의 성격은 민족민주혁명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이며, 이러한 정치적 규정성 때문에 한국은 반봉건적인 요소가 잔존하고 있는 식민지반봉건사회라고 하는 입장이 사회운동에서의 반제운동과 더불어 전면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논리적으로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조건, 주변부자본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는 과거의 방법론을 계승하고 있으나 인간을 보는 관점, 사회를 보는 시각, 민족문제, 분단문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과거의 정치경제학적 시각과는 다른 접근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 차례의 비판을 받으면서 '반봉건 규정'을 '반자본주의 규정'으로 변경하였지만 그것의 인간중심주의적, 철학적·방법론적 기반, 민족해방민주주의 변혁론은 그대로 견지한 채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상의 완전식민지론이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간과하고 자본의 독자적인 축적의 구조, 토착 국가권력의 기초를 부정하는 점을 비판한 것이 다양한 편차를 가진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하 신식국독자론)이다. 신식국독자론은 비록 자본주의의 발달이 있어도 식민지적 조건 때문에 당면 변혁의 성격을 부르주아민주주의적인 것이 된다고 보는 이전의 입장(CA)과, 민족해방론의 반봉건적인 성격을 비판하면서 한국변혁의 성격을 반제반독점민주변혁이라고 주장하는 진영으로 구분된다. 양자 모두 노동계급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자가 민족적·민주적 변혁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독점자본주의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 신식민지적 재생산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사회주의 변혁이 아닌

노동계급 주도의 민중민주변혁이 요청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규정 속에서 신식국독자론은 파시스트적 국가권력이 필연화된다고 봄으로써, 한국의 국가를 신식파시즘이라고 보고 있다.

흔히 사구체 논쟁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주로 제2단계의 이와 같은 식민지반봉건사회론(반자본주의론, 이하 식반사회론)과 신식국독자론의 대립을 지칭하는데, 양자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적 일관성과 실천적 검증과정을 거쳐서 정립된 것으로서 한국사회의 현실을 나름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식반론이 한국의 분단현실에 파생되는 미국의 영향력과 북한의 존재 때문에 광범위한 계급연대에 의한 변혁주체 형성의 필요성을 설명해준다고 한다면, 신식국독자론은 남한 독점자본의 자율적인 힘과 토착 지배권력의 계급적 성격, 남한 계급모순의 현재화, 강압적 국가권력과 민주주의의 좌절 등의 현상을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양자 모두 넓게 보아 마르크스주의적 패러다임의 틀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식반사회론은 정치경제학적 틀을 넘어서서 권력의 자율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그 철학적인 기반 역시 사적유물론의 범위를 벗어나 인간주의적, 주의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반대로 신식국독자의 경우 다분히 '정통'의 입장, 계급적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의 신식국독자론의 경우 레닌의 이론, 개혁 이전의 소비에트의 공식적인 노선, 프랑스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3단계에 들어서 논쟁의 구도가 변하게 된 궁극적인 요인은 5공의 억압적 통치체제가 6공의 의제적 민주주의로 이행하면서 사회운동내에서 개량주의적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소련·동구에서의 사회주의 개혁이 일어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중심이 해체된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신식민지론과 신식국독자론이—스스로는 부인하지만—사실상 '종속이론적' 패러다임, 즉 종속현실의 구조적·단절적 성격을 강조하고 신식민지적 종속이 심화되어 결국 파국을 맞게 되리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들 모두를 비판하고 있는 중진자본주의론, 종속약화론, 개량화론, 사회민주주의론이 조심스럽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 역시 다양한 편차를 가지고 있으나 대체로는 한국자본주의의 힘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의 단절적인 모델은 이미 현실적합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면서 민주주의적 대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단계의 논쟁이 마르크스주의로 이르는 길이었다면 2단계는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논쟁이었고, 3단계는 마르크스주의와 그것을 벗어나는 새로운 방법론이 제기되는 시점이었다. 돌이켜 보면 80년대 한국에서의 사회구성체 논쟁만큼 자기나라의 사회성격을 해명하기 위해 수많은 운동가, 학자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한 경험은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이후의 모든 사회과학적 논의나 운동론은 이러한 진지한 논의를 자신의 출발점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례없는 사회과학적·실천적 논쟁이 지속되었다는 것과 사회운동과 사회이론이 그만큼 발전했는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다.

논쟁이 시작되는 시점이 곧 분단 이후 금기시되어왔던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전면적으로 학습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우리 사상진영은 사회의 모든 구체적인 영역과도 관련을 맺고 있는 이러한 모든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었다. 즉 사구체 논쟁은 한국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읽히고 논의되는 시점에서 전개된 까닭에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학습의 일정한 축적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의 현실적 적용을 요구 받게 됨으로써 성급한 결론에 도달하려는 경향을 낳았고, 논의를 충분히 되짚지 않고 자신의 관점만 강조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경향도 낳았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한두 개만 제대로 검토해도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별로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은 채 넘어가고 말았다. 어쩌면 사구체 논쟁은 당시의 미숙한 이론적 기반과 강한 현실적 요청이 결합된 것이다.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이나 견해를 끊임없이 변경, 수정한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운동진영과 학계의 방법론의 부재에 기인한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현실에 뿌리내린 방법론을 고안해 내지 못하고 '정통'의 권위에 모든 것을 의존하려 하였고, 얼마나 마르크스-레닌의 이론과 정통의 논리를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점이 논쟁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매우 기이한 현상들도 많이 연출되었다. 그리고 신식국독자론

이나 식반론, 중진자본주의론 모두 애초 이들 이론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맥락은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그것을 뒷바침할 수 있는 풍부한 사례연구도 없이 몇 가지 명제와 공식만으로 풍부한 현실 모두를 설명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보였으며, 이런 의미에서 사회운동의 필요에 부응한다는 구호에도 불과하고 실제로는 대중운동에 굳건히 뿌리내리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었다.

크게 봐서 대부분의 논쟁 당사자들이 경제주의적 이론지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지배권력과 국가의 문제, 이데올로기의 문제, 문화의 문제 등 상부구조적인 제 요소에 대한 고려가 거의 생략되어 있고,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이 밝혀지면 그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연역되리라는 그릇된 사고가 만연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입장이 방법론적으로 인간의 행위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서 특정한 구조적 조건에서 인간이 어떠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점도 거의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역사'로서 '사회'를 보려는 노력이 없는 점도 전반적인 한계라 할 것이다.

## 2. 연구영역

사회구성체란 원래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론에서 경제적 사회구성체 혹은 사회구성체로 지칭되는 개념으로서, 경제적 기초를 기반으로 하여 상부구조의 제 영역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통상 사회구성체라는 개념은 인간의 의지와는 독립된 객관적 관계, 재생산의 체계로 간주된다. 그리고 경제적 재생산과 계급투쟁에 의해 그것의 시기구분이 가능하고 본질적인 특징이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르주아 사회학에서 지칭하는 '사회'와는 다른 것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로지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만 존재할 수 있을 따름인데,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의 극히 다양한 변이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성격, 사회제도 등의 개념이 사회구성체라는 개념보다 비교적 낮은 추상수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사회구성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대신 사용되기도 하였다.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구성체란 그냥 특정지역의 자본주의의 성격을 지칭하는 개념이 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로 사회구성체라고 하면 해당사회의 모순구조, 자본주의 성격, 국가의 성격, 계급구조와 변혁주체 형성, 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포함하는 사회의 총체적 재생산과정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사회구성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사실상 사회과학 전부, 마르크스주의 이론영역 전부를 포함하게 되어 개념의 유용성이 상실되어버리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구성체론의 연구영역을 '사회'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한 문제와 자본주의의 성격을 둘러싼 문제, 그리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변혁의 주체와 성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제한시켰다.

### 한국사회에 대한 접근방법

사적유물론의 방법은 크게 제국주의적 규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을 보는 방법론으로 정립되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자본주의적 규정성 외에도 제국주의 규정성과 분단의 규정성이 사회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는 사적유물론의 방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방법과 정치경제학의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여 한국사회의 연구에 적용하지는 주장과, 한국사회의 제국주의적 규정성을 강조하여 정치권력의 소유 문제를 기초로 한국사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어 현재까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한국자본주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

80년대 한국자본주의 역시 한편으로는 고도의 자본축적과 자본에 의한 사회의 재편이 관철되어갔다는 점에서 서구에서 볼 수 있는 고전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경로를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시에 자본이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그 재생산 기반이 일국 단위에서 완결되지 못한 채 선진자본주의와의 구조적인 종속관계를 맺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자본주의가 이러한 종속상황을 극복하고 자립적인 축적기반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욱 심각한 종속상황에 떨어져 급기야 파국으로 치닫거나 남미와 같은 상태로 전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 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체제 내에서의 위치 때문에 설사 완전한 종속의 탈종속의 길로 가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개량의 토대를 확보해갈 것이다”라는 논의 역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한국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식민지라는 규정성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리고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규정이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만큼 보편화될 수 있는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답이 없다.

### 변혁의 성격과 주체

자본주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필연적으로 변혁의 성격과 동력이 어떠한 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즉 한국이 독점자본주의라고 할 때 노동자계급을 주체로 하는 사회주의 변혁의 과제가 곧바로 제기되는가, 신식민지의 규정성 때문에 그렇지 못한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민중민주주의 변혁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변혁전망이 아니라 단순한 전술에 불과한 것인가?

만약 이렇게 답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서구적 의미에서 반독점민주변혁의 문제가 제기되는가 등등의 수많은 쟁점이 있다. 대체로 자본가계급의 헤게모니에 의한 반혁명의 길과 노동자계급의 주도에 의한 혁명의 길만이 존재하고 여타의 길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성격을 희석화시키는 것이라는 원칙론적인 계급적 관점과, 외세의 지배와 강고한 국가권력을 상대로 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민주변혁의 기치 아래 광범한 대중의 결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제론의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소련·동구의 사회주의개혁 이후 민주주의의 쟁취를 단순한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의 전략적 목표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시각도 이제 생겨나고 있다. 사회구성체는쟁에 대한 보다 깊은 위래서는 종합적 문헌소개서인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죽산, 1989~1991) 제1권에서 4권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